

“해양배출 감축 양돈업계 협조와 동참 필요”

- 가축분뇨 해양배출량 꾸준한 증가세
- 양돈농가, 배출중단에 대한 준비해야

정부에서 추진하는 자연순환농업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 가축분뇨 해양배출량 감축을 위한 지속적인 농가 계도 및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12년부터 가축분뇨에 대한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되는 가운데에도 올해 가축분뇨 해양배출량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최근 해양경찰청이 발표한 올해 상반기 폐기물 해양배출 현황에 따르면 매년 10%씩 증가하던 폐기물 해양배출량이 감소추세로 전환하고 있으나, 가축분뇨 해양배출량은 오히려 올해 상반기 131만2천m³로 지난해보다 6.3%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12일 대한양돈협회 정선현 전무와 최성현 부장이 농림부 자연순환농업팀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상철 팀장은 ‘가축분뇨는 자원으로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해양배출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해양배출량이 줄어드는만큼 가축분뇨 자원화를 높여 자연순환농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협회에서 적극적으로 홍보 및 계도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내년에도 자연순환농업 홍보교육 집중 펼칠 계획

특히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홍보교육 예산을 확보하여 양돈협회와 공동으로 전국 순회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축산 및 경종농가의 마인드를 확실히

바꾸기 위한 집중 홍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해양경찰청 역시 지난 10월 13일 폐기물해양배출량 감축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부 시책에 따른 관련업계의 애로 및 입장을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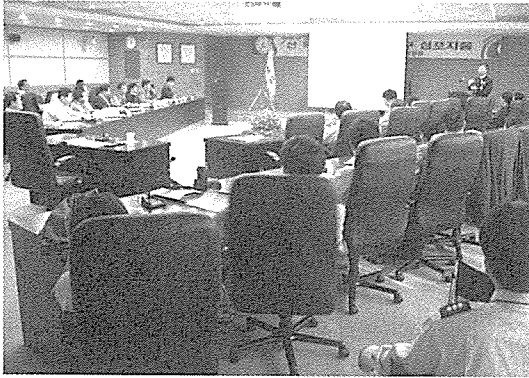
이날 간담회에서 대한양돈협회 경기도협의회 김건호 협의회장은 해경의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양돈농가들을 대상으로 한 일부 해양배출업체들의 횡포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해양배출 품목별 쿼터량제 실시와 함께 부당 한 가격인상 방지대책을 거듭 요구했다.

정부,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단가 조정 검토

해경측은 일부 지역의 경우 가축분뇨 배출량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우려를 감추지 못하는 한편 해양배출시 반드시 고액분리 과정을 거쳐 이물질 제거가 될 수 있도록 양돈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양돈협회에서 요청한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단가 상향 조정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 지원금액이 상향될 수 있도록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배출 가축분뇨 육상처리 인프라 구축 시급



▲ 지난 9월 21일 인천 송도 소재 해양경찰청에서 개최된 산·학(연)·관 공동연구 심포지엄에서 해양배출 물질을 배출하는 주체자나 배출업자 모두가 육상처리에 대한 의지를 가질 필요성과 함께 이를 위해 육상처리 기술개발 및 제도개선 등이 뒷받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가축분뇨 등 해양배출 폐기물에 대한 해양배출 규제단속에 앞서 이들 폐기물을 육상처리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21일 인천 송도 소재 해양경찰청에서 개최된 산·학(연)·관 공동연구 심포지엄에서 해

양경찰청 김영환 계장은 '폐기물의 해양배출 현황과 관리대책' 발표를 통해 '해양투기 폐기물에 대한 규제단속을 한다고 하나 한계가 있으므로, 해양배출 물질을 배출하는 주체자나 배출업자 모두가 육상처리를 하겠다고 의식을 전환하고, 이를 위해 육상처리 기술개발 및 제도개선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축산폐수는 퇴·액비로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으로 해양배출이 시작된 '97년 이전에는 전량을 육상처리했으나, '97년도 사육두수가 710만두에서 '05년도 899만두로 증가하면서 해양투기량도 52천^m에서 2,745천^m로 무려 53배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수처리오니와 축산폐수 등 주요 폐기물에 대해 환경부에서는 하수처리오니 소각시설 등 육상처리시설을 확충하고, 농림부에서는 가축분뇨를 퇴·액비화하여 자원화하는 방안을 확대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2개소 선정

농림부는 자연순환농업 추진대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될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설치사업 대상자 2개소를 선정하고, 개소당 25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농림부는 연내 2개소를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하되, 사업 대상자를 가축을 밀집사육하고 있거나 중규모 이상 양돈농가가 많은 지역의 농·축협 또는 영농조합법인으로 1일 100톤 이상을 처리하

는 곳으로 선정기로 했다.

선정은 내달 중으로 시·도를 통해 접수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를 거쳐 11월 최종 사업자를 선정기로 했다. 또한 내년 상반기 중 이번 사업이 계획대로 착수되어 퇴·액비 유통이 활성화가 되는 등 성과를 보일 경우 2008년부터는 확대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